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충청북도 청원군	
후보자명	변재일	기호	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수도권규제완화 저지				
<div>■ 현황</div> <div><div>○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·시책 추진 지역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</div><div><div>- 세종시 건설, 혁신도시(공공기관 이전), 기업도시 조성 등</div></div><div>○ 새누리당 정부는 기업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를 개혁</div><div><div>- 수도권 공장의 신설·증설·이전규제 개선</div><div>- 공장·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</div><div>-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</div><div>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</div><div>-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 지방 환원 등</div></div><div>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추진</div><div>○ 「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·상 첨단업종을 충청북도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, IT관련 등 미래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 해제, 수도권에 금지되어 있던 IT관련 미래신성장 동력 관련공장 증설 허용</div></div>					
<div>■ 공약내용</div> <div><div>○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입법 추진</div><div><div>-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재추진</div></div></div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‘1% 슈퍼부자’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.				
<div>■ 현황</div> <div><div>○ 이명박정부 들어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밀어 붙이기 등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양극화 심화</div><div>○ 중산층 붕괴,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부자감세</div></div>					

- 철회와 1%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%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
-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·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대전환 필요

■ 공약내용

-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,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가는 문제점 개선.
 - 1% 슈퍼부자 증세 등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.
 - 사회 양극화 완화, 복지재원 확보.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‘사료가격안정기금’ 설치 및 쌀 목표가격 현실화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■ 현황

- 사료 원료의 수입의존도 95%(옥수수 99%, 두류 93%)로 높아 국제곡물가격과 환율 및 해상운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
- 그러나 최근 구제역과 동시다발적 FTA로 축산농가는 몰락위기를 맞고 있음.
더군다나 최근 한우농가 붕괴위기는 △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비 급등이 △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축산농가에게 희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폭등하는 사료 값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△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과 함께 일본과 같이 △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
- 2005년 쌀 목표가격이 도입된 이래 한번도 오른 적이 없는 반면 농가의 비료 등 농업용품 구입비용은 2005년 대비 2011년 상반기 기준 39.6% 상승하였고,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005년 대비 0.3%인상으로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등 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

■ 공약내용

-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지원을 확대하여 FTA,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
- 쌀 소득직불금을 인상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
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및 지역인재할당
<p>■ 현황</p> <p>○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: 대학서열 완화,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 국·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 및 인프라 강화 -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집중 지원 -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지역 인재할당제 -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등 <p>■ 공약내용</p> <p>○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,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</p> <p>○ 지방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% 할당제</p> <p>○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·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함.</p>	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무상보육 실현을 통한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
<p>■ 현황</p> <p>○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('10년 출산율 1.15)이며,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.6%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%에 훨씬 못 미침</p> <p>■ 공약내용</p> <p>○ 어린이집·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 금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,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,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 (지원대상은 0-5세 아동 전체) 	

-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·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.
- ‘방문돌봄 서비스’ 대상을 현행 0~5세아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봄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